

민주, 쌍특검법·헌재 재판관 임명 '비상행동' 돌입

상임위·비상총수시 가동키로
장외집회 등 탄핵 여론전도 진행
내란조사단 “한, 압수수색 승인을”
“윤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버튼”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다음달 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방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고, 장외 집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탄핵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23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대응 기조의 ‘비상행동’이 다시 시작된다”며 “구호는 ‘파면이 답이다, 윤 구속하라’ (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도 하고 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의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에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집

회에 합류하는 방식이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구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한 대행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한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법,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인 저항·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현행법인 윤 대통령의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또한 (한 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헌법 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이러한 사항들을 안 지킬 경우 (한 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부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도 “지금의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심각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계엄 암묵적 동조”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룬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처지다. 그를 총리 자리에 낀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었다”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겠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점검’ 법안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2일 주차 중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중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 23종이나 되고, 29종의 차종은 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차량 소유주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무속 내란’ 햄버거 보살까지 등장”

강유정 “노상원, 점집 운영 충격”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도와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햄버거 계엄 모의’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을 공부했고 철학과 작명, 사주에 능해 ‘남자 보살’로 불렸다고 한다”며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한 천공, 소가죽 벗기는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군에 이어 이제 ‘햄버거 보살’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토록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

해 온 것인가”라며 “윤석열의 앞날을 두고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옥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소구의 결과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 “여야정 국정협의체, 당대표가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는 국민의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국정안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적인 여야정 협의체라면 의장이 낄 자리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함께하면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 힘도 실릴 수 있다”며 “원내대표급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야기한다

는 것은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 발족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리당락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협의체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채은지 시의원 “대법 통상임금 판결... 대책 마련 시급”

산업현장 혼란 완화 나서야

채은지(사진) 광주시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조건부 정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판결과 관련, 광주시가 지역 산업 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22일 제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

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근무 활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지역 노동,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